

이재명 “국익우선, 외교의 제 1원칙이 무너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맹비난 “尹 외교 무능...오염수 방류 저지·역사왜곡 항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 배신’, ‘강대국 대리기사’라는 표현은 물론 조선시대 ‘삼전도의 굴욕’에까지 빗대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란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IAEA(국제원자력기구)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역사 왜곡, 오염수 방류 등 당면 문제를 ‘패싱’당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폭(국가폭력)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상방을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며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연 1회 ‘3국 합동훈련 정례화’라는, 결국 일본의 군사제국화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은 뒤처다 꺼리하게 될 일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신냉전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울어가는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다가 청나라에 침입받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다”며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은 미국이라는 큰 형님 집에서 열린 ‘3국 서열 확인’ 의형제 결연식 같았다”며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 대변인처럼 행동하는데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든 회의로 보인다”며 “면밀히 따지고 보면 3국이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정비해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이달 말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내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국힘, 방탄국회 조장 중단하라”

여, 임시국회 개최 요구...야 “방탄 안되게 비회기 기간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은 방탄국회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가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비회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입장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또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회기를 길게 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25일로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고 6일간 비회기 기간을 남겨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본인 사건으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는데도, 여당이 방탄국회를 조장한다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린

뒤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회기 쪼개기’를 할 수 없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기여코 영장 청구를 이용해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면 여당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영장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 데 대해 “대표의 격에 맞지 않는 언어는 지양해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는 언제까지 이 대표 이야기로 대표 위상을 유지하려 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태원 특별법’ 10만명 입법청원 국회 제출

시민대책회의·유가족협의회 회견

약 10만명이 서명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청원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책임자 처벌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법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어떻게 이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8월 내에 조속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논의

할 수 있다”며 “참사 1주년이 되기 전 특별법이 통과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서명의 무게를 국회가 받아 안고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특별법은 아직 행안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주도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법안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